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자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타당한가?

「서양지성사와 철학」과 「과학기술과 법」강의페어링

경영학과 1학년 201621359 박정아, 송하석 교수님 지도

서론

‘과학기술과 법’ 시간에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서양속’과 ‘공공질서’를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서양지성사와 철학’ 수업 중 헌법의 탄생 역사를 공부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하는 제한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국가로부터 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여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현대 헌법이 국민에게 가하는 제한이 타당한지 알아보겠다

헌법의 역할

헌법의 개념은 18세기 유럽에서 세워져 전세계적으로 뿔어 나갔다. 로크 시민통치에 관한 논고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권리장전,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은 초기 헌법으로써 헌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각각이 발전시켜온 헌법의 역할은 현재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통치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보호하며 권력이 특정 국가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지닌다.

시민통치에 관한 논고	왕권신수설에 반대하며 국민에게는 합법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며, 합법적인 통치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독립선언문 &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국민에게는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넘어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수정 헌법인 ‘권리장전’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약속한다.
인권선언문	어떠한 정치 철학에도 영향 받지 않을, 통치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시된다고 선언한다. 또 삼권분립 체제를 받아들여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미국 권리장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 제1조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국의 헌법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덕분에 현재까지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옥외집회를 소집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이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그 집회는 합법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는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정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 집시법 11조에서는 일부 국가기관들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동성 혼인에 대한 제한

프랑스 인권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제6조: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혼인의 객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본다.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는 헌법이 어떤 정치 이념과 사회적 사상에도 영향 받지 아니할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자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자연권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히 보호받을 평등권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들도 사회적 인식에 의한 차별로 인해 법적 보호로부터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고로 동성 혼인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여겨진다.

결론

헌법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연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옥외 집회에 대한 제한과 동성 혼인에 대한 제한의 예시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일부 국민의 자유에 가하는 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불명확한 기준의 용어들의 사용은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케하며 헌법 하위의 법에 입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게 한다. 또 분명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인 동성애자들의 혼인에 대한 권리를 묵살하는 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대한민국 헌법의 몇몇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권리장전(1791)."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네이버 지식 백과, Web.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헌법 전문."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 백과, Web. 2016년 6월 13일.
벤 도렌. *지식의 역사*. 2010: 갈라파고스. Print.
"프랑스 인권 선언." *학생 백과*. 네이버 지식 백과, Web. 2016년 6월 13일.